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공무원 피살부터 부동산 정책 등 공방

## 21대 국회 첫 국감 돌입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오는 2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툰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다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 與野, 증인채택 놓고 다툼

與 “일반·기관 증인 총 38명 민주당 미동의로 채택 못해”

野 “추장관 자녀 軍의혹 조사중 北 피살사건, 정보·국방위 문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저의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우리 스스로 국회의 기관 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관련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불가함을 전했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다툼으로 30분간 일정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를 국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이유로 국민의힘 주장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잔혹하게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 국감장에 스스로 출석해 진술하

를 원한다”며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의 국제해양법 위반 여부나 현지대 사관을 통한 연락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투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방위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 요구’라는 이유로 거부해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에 책임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살된 공무원) 아들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재차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ool.co.kr

# 韓·日 기업인 상대국서 격리없이 경제활동

양국정부 ‘특별입국 절차’ 합의·시행 비즈니스·레지던스 2개 트랙 적용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인들이 8일부터 상대국에 입국해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양국 정부는 6일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양국 정상 통화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가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명했었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요건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지난 6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일본 입국과 관련 운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시에도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술,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의 경우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는 출국 전과 일본 입국 후로 나뉜다. 출국 전에는 ▲출국 전 14일간 체온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전용차량 왕복 한정에 따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중국(5월1일~), UAE(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등 4개 나라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됐다. /한용수 기자 hys@

# 김장용 배추 수급안정... 고랭지배추의 절반 값

농식품부, 재배면적 증가·기상호조 이달부터 해남 등 전국서 출하예정

올해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배추가 재배면적 증가와 최근 기상 호조로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고랭지 배추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심겨진 가을배추는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주산지인 해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하될 예정이다. 생산량은 123만9000톤으로 평년보다 4% 적지만 전년 대비 17%나 많다. 재배면적(1만 2783ha)은 평년보다 2%,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현재 출하중인 고랭지배추(7월~10월 출하)의 경우 재배면적(7% ↓) 감소와 긴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14% ↓)이 감소해 가격이 평년 대비 높



지난달 2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배추들이 트럭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은 상황이다. 고랭지배추는 여름철 기온이 낮은 평창, 강릉, 태백, 정선 등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재배되고 생산량이 많지 않다. 고랭지배추의 9월 도매가격은 포기 당 7744원으로 평년보다 81%나 비싸다.

고랭지배추는 10월 하순 경까지 출하가 마무리되고 가을배추는 10월 중

순 경부터 출하를 시작해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주로 출하된다.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량은 고랭지 배추의 3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김장철 배추 수급은 10월 중순 이후 가을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가을배추 성출하기인 11월과 12월에는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 가격을 형성할 전망이다.

가을배추 평년 소비자 가격은 9월 5894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10월 4108원, 11월 3023원, 12월 3209원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산지작황 등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인 김장 성수기에 배추 할인 공급, 김장 나눔행사 등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과 김장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화재 대응’ 전동보드 안전기준 강화

산업부, 개정안 내년 7월 시행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기임, 미끄러짐 등의 안

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햇빛과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는 52건 발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고,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지난해 12건 발생한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